

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

연구위원 한요셉

1. 문제제기

■ 청년 고용은 2019년 4/4분기에 양적인 개선 흐름이 나타났으나,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며 부정적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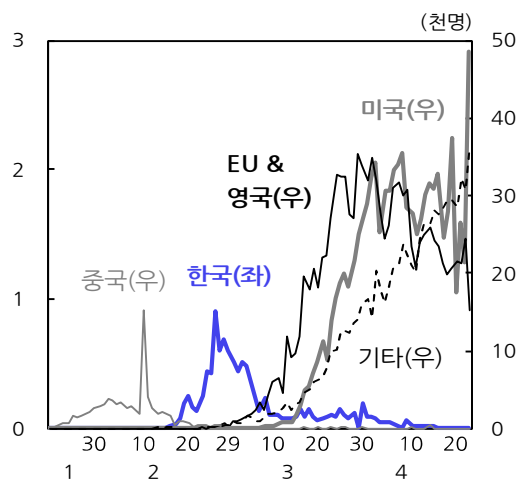
● 청년층(15~29세) 고용부진이 계속되던 중 지난 4/4분기에는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상 개선세가 나타났다.

● 그러나 2020년에 발생한 전 세계적 보건위기(pandemic)로 인해 경기침체와 함께 전반적인 고용위축이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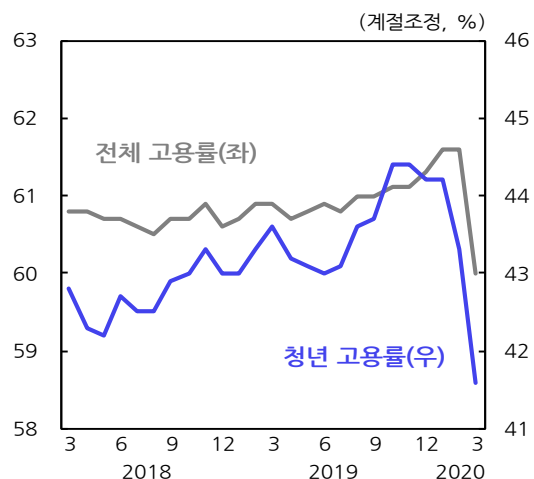
●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 충격은 신규구직 계층인 청년에게 특히 크게 작용하므로 청년 고용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책 수립이 필요

– 2020년 2월과 3월의 청년 고용률은 계절조정 기준으로 1월 대비 0.9%p, 2.6%p 하락하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남.

COVID-19 신규 확진자 수



계절조정 고용률



청년층 주요 고용지표

(% , %p)

	2018				2019				2020
	Q1	Q2	Q3	Q4	Q1	Q2	Q3	Q4	Q1
고용률	42.1 (0.8)	42.5 (-0.1)	43.1 (0.3)	42.9 (1.2)	42.9 (0.8)	43.2 (0.7)	43.9 (0.8)	44.1 (1.2)	42.6 (-0.3)
실업률	10.0 (-0.7)	10.1 (-0.2)	9.4 (0.1)	8.3 (-0.7)	9.7 (-0.3)	10.6 (0.5)	8.1 (-1.2)	7.1 (-1.2)	8.8 (-0.9)
고용보조지표 1	11.8 (-0.9)	12.0 (-0.2)	11.5 (0.5)	10.5 (-0.2)	12.2 (0.4)	13.2 (1.1)	10.4 (-1.1)	9.3 (-1.2)	11.8 (-0.4)
고용보조지표 2	21.4 (-0.5)	21.5 (-0.1)	20.9 (0.3)	20.3 (0.3)	22.1 (0.7)	22.5 (1.0)	20.3 (-0.7)	18.7 (-1.6)	21.1 (-1.0)
고용보조지표 3	22.9 (-0.7)	23.2 (-0.1)	22.8 (0.6)	22.2 (0.7)	24.2 (1.4)	24.7 (1.5)	22.3 (-0.5)	20.5 (-1.7)	23.7 (-0.6)

주: ()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임.

고용보조지표 1: (실업자+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)/경제활동인구 × 100

고용보조지표 2: (실업자+잠재경제활동인구)/확장경제활동인구 × 100

고용보조지표 3: (실업자+잠재경제활동인구+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)/확장경제활동인구 × 100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2. 2020년 이전의 청년 고용

■ 2020년 이전의 청년 고용률 수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으나, 청년층 내 인구 비중 변화를 고려할 경우에는 2019년 3/4분기까지도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됨.

● 청년층(15~29세) 내에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20대 인구의 비중 증가만으로도 청년 고용률이 증가할 수 있음.

– 15~19세 고용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 10대 인구가 감소하거나, 20대 인구가 증가하는 연령 구성비 변화(compositional change)만으로도 청년 고용률은 상승

* 15~19세 고용률은 2018년 7.4%로 20~24세(43.7%)나 25~29세(70.2%)보다 낮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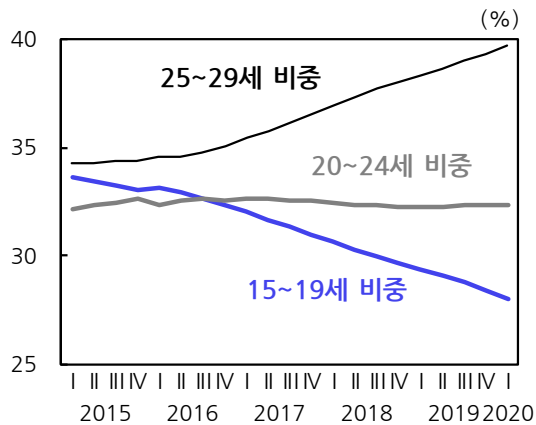
– 인구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는 최근 상황에서는 인구 구성을 고정한 상태에서 각 연령별 고용률의 변화만으로 설명되는 청년층 고용률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

● 연령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를 보정할 경우 2016년 말부터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, 청년 고용상황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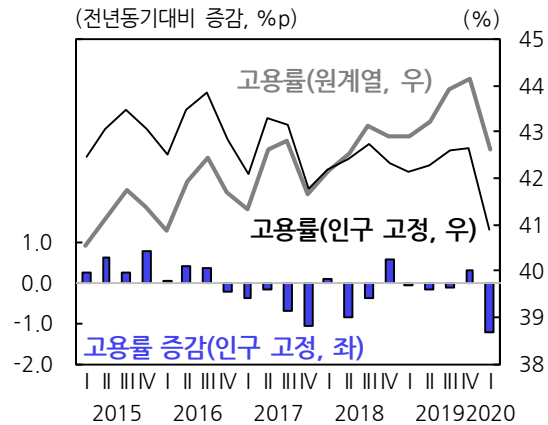
– 2016년 4/4분기 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한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위축 및 조선업·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청년 고용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함.

– 아울러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 정년 연장의 효과가 201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점도 청년 고용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(한요셉, 2019).

청년층 연령 구성의 변화



청년 고용률의 변화(인구 구성비 고정)



주: 인구 구성비 고정 고용률은 각 연령별(1세 단위) 및 성별 인구 비중을 2018년 3월 수준에 고정하여 계산함.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■ 2019년 4/4분기에는 인구 비중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양적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, 한편으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증가

● 2019년에도 제조업 전반의 고용감소세가 계속되었으나 국내 서비스 소비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에 힘입어 서비스업 고용이 증가하였으며, 4/4분기에는 제조업 고용감소세 완화와 함께 고용회복세가 나타남.

－ 2019년에 예술·스포츠·여가 및 숙박·음식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이 증가하였는데, 이는 내국인 서비스 소비의 지속적 확대(2018년 2.2% → 2019년 2.5%) 및 2018년 2/4분기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세와 밀접한 연관

* 다만, 예술·스포츠·여가 및 숙박·음식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청년층 임금수준이 낮아(2019년 8월 약 2/3) 질적 개선세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상황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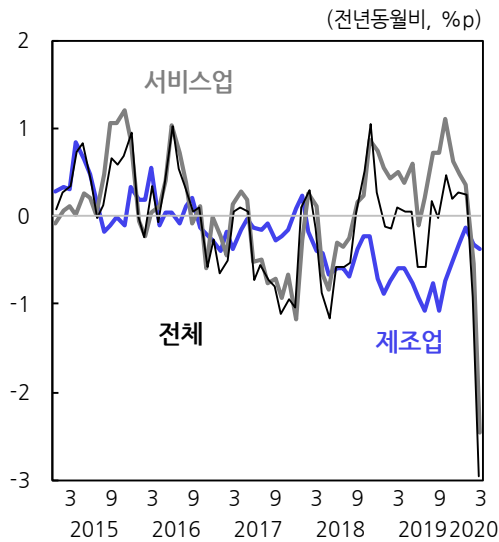
－ 한편,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·자동차 등에서 고용둔화가 지속되었으나 조선업에서 청년층 채용이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났고, 4/4분기에는 제조업 전체 고용감소세가 일부 완화됨.

● 한편, 2019년 3/4분기 이후 실업률을 비롯한 고용보조지표들의 급격한 하락은 실제 노동수요의 증가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확대에도 기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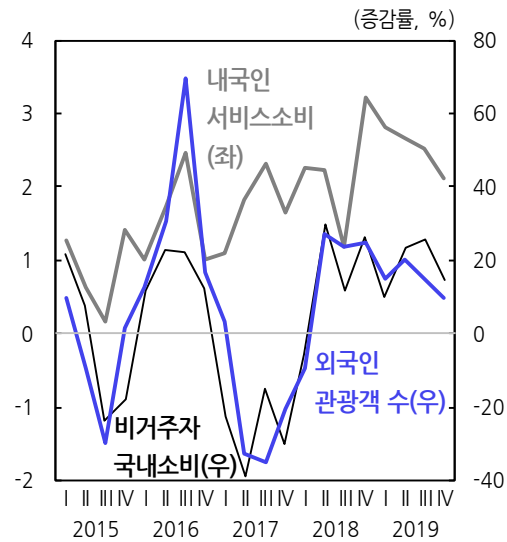
－ 연령 구성비를 통제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19년 하반기에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

－ 사유별로는 2019년에 ‘쉬었음’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증가했고 하반기에는 ‘재학·진학준비’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증가세로 전환된바, 이는 수요-공급 미스매치 등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진학을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함.

청년 고용률 증감(인구 고정)의 산업별 분해



내국인 서비스소비와 외국인 국내소비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;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; 관광공사, 「관광통계」.

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변화

(%, %p)

	2018				2019				2020
	Q1	Q2	Q3	Q4	Q1	Q2	Q3	Q4	Q1
비경제활동인구 비중(A)	53.1 (-0.6)	52.7 (0.2)	52.4 (-0.4)	53.2 (-1.0)	52.5 (-0.7)	51.6 (-1.1)	52.2 (-0.2)	52.5 (-0.7)	53.2 (0.7)
비경제활동인구 비중(B) (인구 고정)	53.1 (0.3)	52.8 (1.1)	52.9 (0.4)	53.8 (-0.3)	53.3 (0.2)	52.7 (-0.1)	53.6 (0.8)	54.1 (0.2)	55.1 (1.8)
사유별									
재학·진학준비(B1)	40.2 (0.4)	40.1 (1.2)	40.4 (0.7)	41.5 (-0.2)	39.8 (-0.3)	39.5 (-0.6)	40.4 (0.0)	41.4 (0.0)	40.8 (1.0)
취업준비(B2)	5.3 (0.0)	5.6 (0.1)	5.4 (-0.1)	5.4 (0.4)	5.9 (0.6)	5.7 (0.1)	5.6 (0.3)	5.4 (0.0)	6.0 (0.1)
쉬었음(B3)	3.5 (0.0)	3.3 (0.2)	3.5 (0.4)	3.4 (0.0)	3.9 (0.4)	3.8 (0.5)	4.0 (0.5)	3.8 (0.4)	4.6 (0.7)
그 외(B4)	4.1 (-0.1)	3.8 (-0.4)	3.6 (-0.5)	3.5 (-0.5)	3.7 (-0.4)	3.7 (-0.1)	3.6 (0.0)	3.4 (-0.1)	3.7 (-0.0)

주: 전체 인구 중 비중을 의미하며, ()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임. 비경제활동인구 비중(인구 고정)은 연령별(1세 단위) 및 성별 인구구성비를 2018년 3월 수준에 고정하여 계산한 값임.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3. 2020년 이후의 청년 고용

■ 지난 2월 이후 보건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음.

● 지난 1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청년층 고용률은 2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음.

- 청년층 고용률(원계열)은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.1%p 상승하였으나, 2월에는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고, 3월에는 큰 폭의 하락(-1.9%p)으로 전환
- 연령별 인구비중을 고정한 고용률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,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0.2%p 증가하였지만 2월과 3월에는 각각 1.0%p, 3.0%p 하락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고용률 증가폭이 3%p 정도 축소됨.
- 산업별로는 청년층의 경우 숙박·음식점업, 예술·스포츠·여가 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·지원·임대서비스업(여행업 포함) 등에서 고용률 상승세가 하락세로 급격히 전환되었으며, 교육서비스업에서도 일시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남.

● 현재 청년층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내 통제로 인해 대면 업종의 서비스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며 나타난 현상임.

- 3월 고용률은 국내 보건 상황이 '심각' 단계로 격상된 이후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신규채용도 위축된 영향을 주로 반영함.
- 3월 중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감염이 확산되어 각국의 통제가 강화됨에 따른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, 2분기 이후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.

청년층 고용률 증감 추이

(%, %p)

	고용률				고용률(인구 고정)			
	12월	1월	2월	3월	12월	1월	2월	3월
청년층 고용률	43.8	44.0	42.9	41.0	43.8	43.9	42.7	40.7
전년동기비 증감	1.2	1.1	0.0	-1.9	0.3	0.2	-1.0	-3.0
전년동기비 증감의 전월비	(0.1)	(-0.0)	(-1.1)	(-1.9)	(0.1)	(-0.0)	(-1.2)	(-2.0)
주요 산업별 고용률 증감								
숙박·음식점	0.7	0.5	0.1	-0.3	0.6	0.5	0.1	-0.3
예술·스포츠·여가	0.6	0.5	0.4	-0.1	0.6	0.5	0.4	-0.2
사업시설관리·지원 및 임대	0.0	-0.1	-0.3	-0.2	0.1	-0.1	-0.3	-0.3
교육	0.2	0.3	0.2	-0.4	0.1	0.2	0.1	-0.5

주: 고용률(인구 고정)은 연령별(1세 단위) 및 성별 인구구성비를 2019년 12월 수준에 고정하여 계산함.
() 안은 전월대비 차이임.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.

■ 향후 청년층 고용은 해외의 보건위기와 이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더욱 위축될 전망

- 3월 중 많은 기업의 신규채용이 일시적 혹은 무기한으로 연기되었으며,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기업이 증가할 전망

- 구인구직 플랫폼 '사람인'에 따르면, 3월 중 평일 채용공고 등록건수가 전년동기비 32.7% 감소하였고, 특히 신입사원 채용공고는 44.4% 감소하여 경력직(-28.0%)보다 감소폭이 큼.
- 다만, 3월 채용공고의 급감은 국내 보건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*도 포함하고 있어서 4~5월에 감소세가 부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음.

* 4월 15일 현재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의 상반기 공채 일정은 모두 확정됨.

- 향후 해외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제조업 및 관련 분야와 내수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위축되고, 특히 청년층의 고용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.

- 글로벌 금융위기 시 고용위축은 주로 해외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으며, 제조업 고용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서비스 업종에도 파급효과가 미침(Box 1).
- 당시 타 연령대와 달리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2%p 하락하고 회복도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는 등 고용위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였음(Box 1).

■ 현재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이번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-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단기적인 임금 손실 외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

- 졸업 직후 10년간의 경력 동안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험적 관계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, 일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및 매칭 효율성 증진이 임금상승의 대부분을 설명
-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졸이나 대졸 노동시장에서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이 특히 큰 것으로 추정되며,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 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균 4~8%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됨(한요셉, 2017).

- 취업한 경우에도 경력 초기의 직장 선택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향후 경력 개발의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

- 불리한 경기 상황으로 인해 첫 직장 임금이 10% 낮아질 경우 경력 10년 차 이후로도 같은 연령의 근로자보다 임금이 10% 이상 낮거나(고졸) 전일제 취업률이 1%p 이상 낮음(전문대졸·대졸)(한요셉, 2017).

Box 1. 글로벌 금융위기 시 고용 충격의 이질성

■ 글로벌 금융위기는 해외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로 한국에서는 2008년 4/4분기부터 GDP에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, 고용에는 1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가운데 산업과 연령대별로 상당한 이질성을 보임.

●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4/4분기부터 실질 GDP 감소가 본격화되었고, 2009년 4/4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함.

－ 실질 GDP 성장률은 2008년 4/4분기 -1.7%, 2009년 1/4분기 -1.8% 및 2/4분기 -1.2% 등을 기록

● 고용에는 2009년 1/4분기부터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1%p 이상 하락하는 등 시차를 두고 충격이 실현되었으며, 2010년 2/4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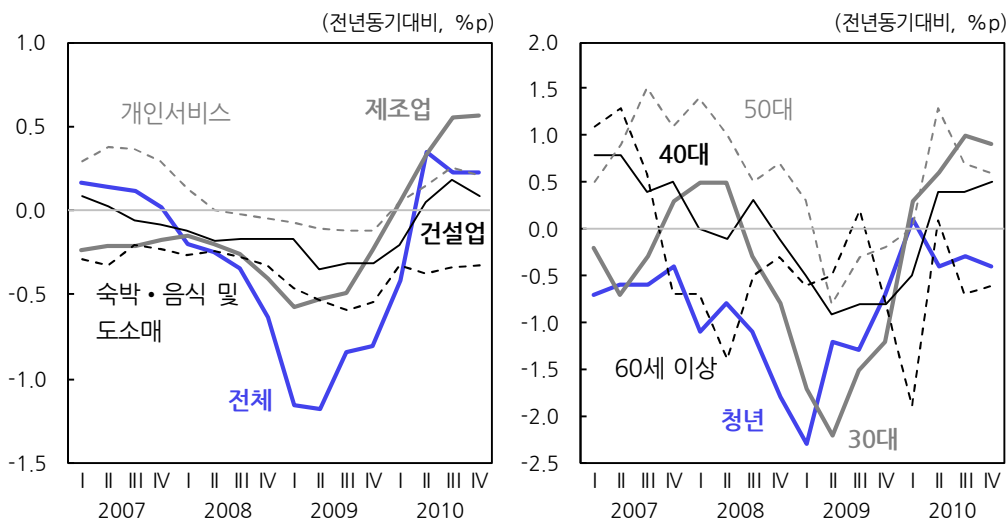
－ 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과 숙박·음식점업 등에서 고용위축이 크게 나타남.

－ 연령대별로는 청년 및 30대에서 각각 2009년 1/4분기와 2/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%p 이상의 고용위축이 나타남.

● 연령에 따른 고용 충격의 차이는 신규구직 여부와 긴밀한 연관이 있음.

－ 강한 고용보호제도하에서 고용 충격은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

글로벌 금융위기 시 산업별·연령대별 고용률 증감



4. 정책적 대응 방향

- 현재의 청년층은 고령화된 인구를 부양할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 인적자본 및 일경험 축적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높음.
 - 인구 고령화로 총부양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단기적 위기의 장기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증대됨.
- 현 경제위기는 직접 대면 및 이동 등이 제한되면서 업종별로 이질적인 수요 충격이 가해진 상태로, 고용정책의 효과성이 기존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
 - 여행·숙박업을 비롯하여 음식점업·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소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, 온라인 소매업 등 비대면 업종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확대됨.
 - 주요 고용정책 중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는 제공 자체에 제약이 있으며, 실업급여 및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해짐.
- 현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, 여전히 미취업 청년은 배제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됨.
 - 구직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1년 미만 가입자까지 확대되었으나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여전히 해당되지 않으며, 가구 단위 복지 지원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.
 - 취업기회의 지연 및 상실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지만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, 국민취업지원제도(1 유형)가 도입될 경우 청년층 지원 기준은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
- 국내에서 보건위기가 단시간에 종식되더라도 대외수요 충격이 지속된다면 고용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필요
 - 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종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채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
 - 취업난이 예상되는 최근 졸업생들의 경우 IT를 비롯한 향후 유망 분야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할 필요
- 보건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큰 폭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산업·인력양성 정책의 변화와 함께 교육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도 병행되어야 함.
 - 보건 및 IT 부문의 확대에 대비하는 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의 변화가 필요
 - 특히 교육 부문에서 온라인 교육의 내실화, 대학 전공선택의 유연성 제고, 진로교육 강화 및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성 강화 등의 개혁이 시급함.